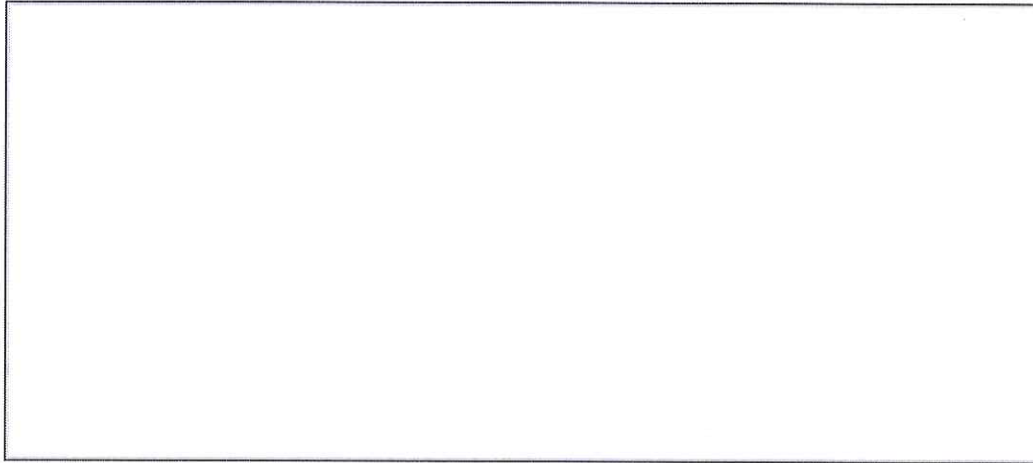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장애 학생들 ‘왕따·폭행’ 또래 때문에 운다

10년간 47.1% 지속적 증가... 발달장애인 '높아'
보험차별도 제자리걸음... “특정 영역 제도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23 09:35:5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2005년, 2011년,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직접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여년동안 초·중등학교, 보험계약 차별처럼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경험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이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서명한 당사자국으로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10명 중 4명 “장애 있다는 이유로 차별”=지난 10년간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변화 추이와 주요 특성을 살펴본 결과, 2014년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느끼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7.8%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 39.9%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나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본인이 경험한 장애 차별뿐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역시 높은 수준 (72.6%)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7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장애인의 8.3%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도의 7.8%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대부분의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장애인 결혼은 ‘OK’, 입학은 ‘안 돼’=장애인이 체감하는 차별을 생활영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일부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2005년 29.6%이던 결혼 시 차별 경험은 2014년 16.4%로 13.2% 포인트 감소했고, 취업 시 차별 경험은 2005년 39.1%에서 2014년 35.8%로 3.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는 차별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이나 전학 시 느끼는 차별은 2005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은 지난 2005년 46.2%에서 2014년 47.1%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 것.

보험제도 계약에서의 장애인 차별도 2014년 45.4%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의 차별 경험 영역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 및 전학 시 차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신체적 장애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모든 교육과정 동안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이 51.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역시 46.6%나 차지했다.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을 행위 주체별로 살펴보면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또래 학생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교사,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들이 때려요” 발달장애인 차별 심각=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63.6%나 차지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은 보험제도 계약, 의료기관 이용, 지역사회 시설(음식점, 극장, 수영장 등)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제도 계약에서의 차별 경험은 모든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 신체 기능 장애인에 비해 내부 기관 장애인이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높아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사연 최복천 연구위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장애 일반 또는 신체장애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의 한계를 직시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은 학교 교육 기간 동안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교육권 침해 및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 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il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ilnews@abil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ilnews.co.kr)

에이블뉴스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단독] 청각장애학생 따돌림, 방관하고 면박 준 교사들

입력 2014-10-31 04:40

"리코더 못 불면 반 전체 점수 없다"

음악교사 무신경 탓 따돌림 심해져

담임은 소극적 대처...학폭위, 가해학생들만 징계 착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한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던 청각장애 학생이 교사들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언어 폭력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들이 따돌림을 방관하고, 오히려 아이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30일 서울 A중과 이 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 B(13)군의 부모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B군은 음악 수업의 리코더 연주 수행평가 도중 교사로부터 “23일 음악시간까지 제대로 불지 못하면 학급 전체에 수행평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아 4세 때 인공 와우 수술을 받은 B군은 청각장애 2급으로 학교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모든 소리가 소음으로 들린다.

음감이 비장애 학생들보다 떨어져 연습을 해도 리코더 연주 실력이 늘지 않았던 것인데 반 친구들은 “장애인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못 받는다”며 비난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B군의 부모는 학년 초 담임교사에게 “음악 실기 평가 등 청력을 사용해야 하는 시험이나 과제 등의 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올해 1월 시행된 교육부의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청각장애 학생은 청력을 사용해야 하는 시험을 필답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B군은 반 친구들에게 리코더를 불지 못하는 ‘공공의 적’이 돼 버렸고, 문제가 커지자 담임 교사는 특수교사에게 B군의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결과 B군은 1학기 때부터 같은 반 학생 5~6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놀림, 언어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학생들은 B군의 어깨를 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 친구 C군은 B군에게 수시로 “넌 리코더도 못 부는 장애인이나”는 말을 했고, 지난달에는 발로 밟은 과자를 먹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상황을 담임 교사에게 호소했으나 교사는 가해학생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아이를 도와주는 봉사자로 가해학생 C군을 지정해 괴롭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군의 부모는 관할 경찰서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학교는 29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B군의 아버지(45)는 “사건을 방치하고 키운 교사들과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한 학교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이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고 학교도 조정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실기 평가는 어려운 과제지만 음악 교사가 학생에게 평가 기회를 두 번이나 줬다”며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는 다른 학생들의 점수도 공개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군의 아버지는 “음악 실기 수행평가 점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는데도 교사가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사들이 만나달라는 말만 할 뿐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